

대선 앞두고 술렁이는 PK민심

박근혜-야권 후보 지지율 격차 10%P 불과… 與 대책 돌입

TK 박근혜-PK 안철수·문재인 양분 관측

연말 대선(12월 19일)을 90여일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영·호남 지역주의 속에 수도권·충청권이 승패를 걸린다.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PK 지역 표심에 의해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그간 PK는 새누리당 전통 강세지역이었다. 하지만, 야권 유력 대권 주자들이 PK 출신이고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일방적 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선 새누리당이 51.3%의 정당 지지를

기록했고 진보 진영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합계는 40.2%였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야권의 PK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선 초반 PK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야권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P 안팎에 불과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0.7%, 41.4%를 기록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의 양

자대결은 48.3%, 38.8%로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이 지역 조사 인원이 160명에 불과, 전체 PK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때 안 원장이 박 후보를 앞선 적도 있다는 점에서 PK 민심의 동향성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영남권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고한 지지율을 보이는 TK(대구·경북)와 문재인 경선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고향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로 양분, 엇갈린 표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지역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제기된 PK 소외론과도 무관치 않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무산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권영길·천영세 이어 천호선·이정미도 탈당

통합진보당 분당 가속화

통합진보당 천호선·이정미 최고위원이 11일 탈당을 선언하는 등 신당권과 측의 탈당 행렬이 이어졌다.

천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으로 이루어 한 기대와 꿈이 실패했다”면서 “강기갑 대표가 사퇴한 길에 우리 두 최고위원도 함께 가려 한다”고 말했다.

했다.

전날 옛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 3700여명과 권영길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탈당한 데 이은 것이다.

신당권과 측에서는 또 유시민·조준호 전 공동대표와 심상정·노회찬·강동원 의원 등이 12일 탈당하는 등 혁신

재창당을 추진했던 주요 인사들은 이번 주 내로 탈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후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과의 적극적 모색을 하고, 농민·빈민·학계·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부문들과 접촉하고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선 전 창당으로 곧바로 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권과 측의 ‘진보정치 혁신모임’을 비롯한 신당 추진 세력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16일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해 정치적 주진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권노갑 전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중국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 공동 발의

정동준·이재오 의원

새누리당 정동준·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현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에 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 전부터 금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분위·능력분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병훈 ‘구도심 재생’ 포럼 개최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원장 이병훈·사진)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빌딩 3층 세미나룸에서 ‘구도심 재생의 방향과 실제적 방법’을 주제로 한 1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왕근(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 박사와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원장이 나서 각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광주 재개발사업의 실태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는 재개발 관련 주민위

원회 및 재개발 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재개발 정책을 주로 연구해 사실상 도시재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와 광주의 지역 재개발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등이 동시에 소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무총리실은 비슷한 대부분 정부 기관이 ‘600년 수도’ 서울을 떠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집결하는 거주적 사업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정확하게 10년 만이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에 본격 돌입한다. 이전 대상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다.

올해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 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2013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2014년에는 4개 중앙 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 이전은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하며 충남 연기·공주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앙상,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세종시 수정안은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

/연합뉴스

《金大中自傳》中文版出版座谈会

김대중 자서전 출판 기념회

主辦單位：中國人民大學

主辦：中國人民大學

2012年9月12日 北京

2012年9月12日 北京



김대중 자서전 중국어판 출간 기념식이 12일 베이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자서전 중국어판 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중국어판으로 출간됐다.

중국 인민대학출판사는 12일 베이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청사에서 ‘김대중 자전(金大中自傳)’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희호 이사장은 “자서전이 많

은 중국인에게 읽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굶하지 않은 남편의 생애와 그의 정신, 한국의 역사를 이

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허야오민(賀耀敏) 인민대학출

판사 사장은 “이 책을 통해 김대중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중요성을 깊이 알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대중 자서전 중국어판은 김 전 대통령의 출생부터 대통령 당선까지의 시기를 다룬 1권과 대통령 재직 시절에서 서거까지를 기술한 2권으로 나뉘어 발간됐다.

김 전 대통령 자서전은 2010년 8월 국내에서 발행됐고 작년에는 일본어판이 나왔다. /연합뉴스

총리실 내일 세종시 이전 스타트

2014년까지 36개 정부기관 옮겨

지방 균형발전 기대

행정비효율 해결 과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축이 대이동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비슷한 대부분 정부 기관이 ‘600년 수도’ 서울을 떠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집결하는 거주적 사업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앙상,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세종시 수정안은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

/연합뉴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으면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이곳으로 분산시키면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행정기능이 서울과 세종시에

서 분리 수행되면서 관가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예상된다. 정부는 영상회의를 활용하고, 매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시간 등을 조정하며,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풀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완전히 구현되기까지 업무 비효율이란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최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은 공인중개사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급 구

☆전남지역☆

염 전 양어장 (폐염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FAX)223-1772, 010-802-2532

(광주동 신분점: 대동 소방서리전)

대인동삼일부동산

원룸 파실분 대화영!

(마포구 다리 대기증)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리를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우립 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일관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FAX)383-5221, 010-609-5221

(상무지구 일부)